

통합돌봄 서비스 구축으로 지역 중심 사회적 안전망 강화

경상남도 통합돌봄과
2025.10.16.

전북특별자치도 고령친화정책과
고령친화복지팀
2025.11.4.

경상남도, 경남형 통합돌봄 시행 본격화

경상남도가 수요자 중심의 통합돌봄 체계를 가동한다. 노인인구 증가와 1인 가구 확대에 대응해 기존 공급자 중심의 복지전달 체계를 개편하고, 일상생활지원·주거지원·보건의료·이웃돌봄을 통합 제공하는 체계를 마련한다.

경남형 통합돌봄은 기존 서비스 연계, 긴급돌봄, 틈새돌봄, 이웃돌봄으로 구성된 4중 안전망을 기반으로 한다. 특히 2023년 시범사업을 바탕으로 표준화된 ‘틈새돌봄’을 전면 시행하며, 광역지자체 최초로 관내외 병원 동행 서비스를 도입해 지역 간 이동을 포함한 의료 접근성을 강화하였다. 또한 전 시·군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305개 읍·면·동에 통합돌봄창구를 설치하고, 재택의료센터 확충 등 의료돌봄 서비스 제공 기반도 강화한다.

도는 올해 초 전담부서인 통합돌봄과를 신설하고 추진체계를 구축하였으며, 돌봄활동가 양성 및 이웃돌봄 우수마을 육성을 통해 지역 기반 돌봄 체계도 확대하고 있다. 2025년부터 2027년까지 약 5,000명의 돌봄활동가를 단계적으로 양성할 계획이며, 18개 시·군 복지관을 중심으로 안정적인 활동 기반을 마련하였다. 또한 생성형 AI 기반의 통합복지 플랫폼을 2026년 6월까지 구축해 도민들이 자신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쉽게 안내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경남형 통합돌봄은 제도 정비와 인프라 확충을 거쳐 2026년 1월부터 시행된다.

전북특별자치도, 전 시·군 통합돌봄 체계 구축 추진

전북특별자치도가 2026년 3월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에 대비해 지역 여건에 맞는 통합돌봄 체계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과 제도 기반 정비에 나섰다. 도는 통합돌봄 시범사업을 2023년 전주 1곳에서 시작해 2025년 9월 기준 도내 14개 모든 시·군으로 확대하였다. 그중 전주시는 예산지원형, 나머지 13개 시·군은 기술지원형으로 운영된다.

전주시는 총 10억 원 규모의 예산을 바탕으로 전담 2개 팀을 구성하여 지역자활센터, 의사회, 민간 돌봄기관 등과 연계한 통합 사례관리 및 보건·의료·주거·영양 관련 지원 등 통합 서비스를 제공한다.

기술지원을 받는 다른 시·군에서는 보건복지부의 통합돌봄 교육 및 컨설팅 지원을 바탕으로 각 지역에 전담조직을 구성하고 전달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도는 시범사업의 성과를 바탕으로 지난 10월 24일 도·시·군 통합돌봄 우수사례 발표회를 통해 표준화된 서비스 모델을 공유하였으며, 2026년 제도 시행 전까지 전 시·군의 조례 제정을 완료하고 실효성 있는 모델을 정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